

# 與 “참을만큼 참았다... 이번주 원 구성”



미완성 국회 언제까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 3차 추경안 처리 시급... 상임위장 단독 선출 가능성 시사 통합당과 11대 7 배분안 협상 시도... 내부 강경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주 원 구성 완료'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미래통합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최재명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민주당이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에서 추경과 원 구성 마무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통합당이 국회를 끝까지 보이콧할 경우 상임위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 채 '장의 언론폐리'를 이어가는 데 대한 불만이 나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어제는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늘은 또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석자들 사이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언제까지 국회 정상화를 늦출 것인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의석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장 '11대 7' 배분안의 정신을 준수하며 통합당과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

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내일 정도까지는 통합당을 기다릴 수 있지만 주 후반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차 추경안의 6월 통과를 촉구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금주 원 구성'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러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 전망이다. 추경안 심사에 필요한 예산결산특위 등 일부 상임위의 위원장만 우선 선출하는 방안과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전선을 여당 몫으로 선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추경 심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민주당 몫으로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가 이후에 통합당 몫 7개는 돌려주는 방안도 아

이디어 차원에서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무한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전 상임위 독식'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제 위기 대응과 남북 관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이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18개 다 가져가면 국민의 공감대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 민주 “탈북단체 대북빠라 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에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무력행사를 불사하겠다는 것은 점점 지역 주민과 국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경찰은 엄중한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역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도록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원내대표는 "접경지역의 생명 안전 위협은 물론 공권력에 도전하는 탈북법과 방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대남 전단살포 예고에 대해선 "저급한 행동은 남북 긴장만 조

성하고 물자만 소진할 뿐"이라며 "북한이 파국을 원치 않으면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대남전단이 관계개선 도움이 안 되듯 대북 전단 또한 백해무익하다"며 "탈북자단체가 살포 강행시 경찰,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행위를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또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의원의 핵무장론에 대해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고, 한미동맹의 사실상 파괴를 의미한다"며 "북이 핵을 유지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은 "현실성이 없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 민주 '2학기 등록금 감면' 대학 지원 검토 대학 재정 파악 뒤 구체 방안 확정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을 깎아주는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이 침해돼 1학기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것과 맞물려 당정이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2학기 등록금 감면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정부 예산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인 조치를 유도하되, 이를 실행에

옮기는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접 지원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당정은 각 대학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지원 방식뿐 아니라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간접적이라도 지원하고자 하지만 정부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국회가 정상화돼 있지 않은 만큼 일단 교육 당국과 함께 대학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민주, 윤석열 비판 수위 높이고 사퇴론엔 거리

### "인권부장에 한명숙 사건 조사 지시는 월권행위" 열린민주당 "전혀적인 제식구 감싸기" 비판 가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의 조사 책임자로 대검 인권부장을 정한 데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진정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검찰부를 지목한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는 일견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검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되도록 보이는 것

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인권부는 조사 권한이 없는데 조사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월권 행위"라며 "윤 총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든 (제 식구) 바꾸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박병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 총장이 '충실하겠다'고 한 조치는 검찰 조직도 아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향한 비판에 열린민주당도 가

세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윤 총장의 지시는 썩음을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라며 "시민들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음침마속이라도 해야 할 지경에 자기 직계 부하들을 감싸는 것을 보면 본인도 관여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적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는 '윤석열 사퇴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선불리 제기할 경우 후폭풍을 부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계 의원은 "(윤 총장은) 스스로 사퇴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중요치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 강기정 靑 수석 내일 전남 방문 블루이코노미 후속 조치 논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남 지역 핵심현안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지원방안 후속 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나주와 목포를 방문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 수석은 오는 24일 오후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열리는 블루이코노미 비전 포럼에 참석한다. 한편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강 수석은 블루이코노미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블루 에너지 사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승일 서울대 교수가 '에너지 신산업, 왜 전남이 최적지인가'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유기홍 "전두환 사후 재산 추징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21억원을 사망 후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죄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후에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추징·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했으며, 제3자가 범죄 행위자로부터 불법 재산을 상속·증

여받을 때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유 의원은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는데 11억을 받았지만,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전씨 일가의 상속, 증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5공 비리과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000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b>건 물</b>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b>건 물</b>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b>의료시설</b>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b>의료시설</b>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b>공 장</b>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b>공 장</b>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b>공 장</b>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b>공 장</b>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